

독일 사후 규제영향평가 관련 규제기관 및 전문가 면담을 위한 출장

2023. 02. 05. - 11.



1 배경 및 목적

1) 독일의 사후 규제영향평가 제도·운영에 대한 워크숍 진행

- KDI와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KAS)의 공통 관심사에 대한 지식공유,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한 상호 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KDI-KAS 간 양해각서 체결(1차: 2018.9.19., 2차: 2020.9.18.)
- KDI와 KAS 사이의 이러한 연구협력의 일환으로, 금번 출장에서는 최근 국내에서 도입을 구상하는 '사후 규제영향평가' 제도에 관한 독일 사례를 공유하고 시사점을 얻기 위한 전문가 워크숍 개최
 - 독일은 2000년대 초반 도입된 '입법영향평가(GFA)'의 일환으로 사후영향평가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 중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사후영향평가(rGFA)를 추진하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
 - 학계 전문가인 FHM Bielefeld의 Prof. Wittberg와 Prof. Dietsche가 독일의 사후 규제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발제 진행
 - 또한 한국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후 규제영향평가 제도 설계(안)를 공유하고, 독일 사례와 비교 및 시사점 도출

2) 독일 규제개혁 관련 기관 면담

- 특정 부처(또는 기관)에게 규제개혁 제도기획 및 추진의 전권을 주지 않고, 다수의 관련 부처에게 고유한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유기적인 체계를 만드는 것이 독일 규제개혁의 특징
- 이를 위하여 독일 규제개혁의 주요 추진기관들과의 면담을 통해 독일 규제개혁 정책과 규제영향분석의 제도 운영 현황 및 성과 공유
 - National Regulatory Control Council(NKR)의 전직 위원장 및 위원과의 면담을 통해 독일 규제개혁 체제 및 규제심사 운영 현황 공유
 - 또한 금번 출장에서는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 주의 규제자문위원회(NKR) 담당자와의 추가적인 면담을 통해 연방이 아닌 주 정부 단위에서의 규제개혁 체계 파악
 - 사전 및 사후 규제영향평가에 활용되는 규제순응비용을 추정하기 위한

표준비용모델(Standard Cost Model)을 개발하는 연방통계청(Federal Agency of Statistical) 소속 팀과의 면담 진행

2 출장 개요

- 예 산: 규제 사후영향평가를 위한 주요국 사례 연구
- 기 간: 2023년 2월 5일(일) ~ 11일(토), (5박 7일, 입출국일 포함)
- 출장지: 독일 베를린, 비스바덴
- 출장자: 총 2명

	이름	소속 및 직함
1	전수민	KDI 규제연구센터 분석평가팀 전문위원
2	이주원	KDI 규제연구센터 제도연구팀 전문연구원

3 주요 일정

일자	시간	내용	비고
2.5 (일)	01:25~09:15	출국(인천→암스테르담→베를린)	· KL0862 · KL1821
	09:30~15:00	숙소까지 이동 및 체크인	· Flughafen BER
	15:00~18:00	워크숍 사전 미팅	· 참석: 최정애, 전수민, 이주원
2.6 (월)	09:30~12:30	Workshop on Ex-post Evaluation: Session 1	· 장소: Academy of Konrad Adenauer Stiftung(Berlin) · 참석: Prof. Wittberg, prof. Dietsche 외
	12:30~14:30	Lunch Break	
	14:30~16:00	Workshop on Ex-post Evaluation: Session 2	· 장소: Academy of Konrad Adenauer Stiftung(Berlin) · 참석: Prof. Wittberg, prof. Dietsche, Mrs. Meister-Scheufelen

일자	시간	내용	비고
2.7 (화)	14:30~17:00	Interview with Cologne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on Reduction of Bureaucracy and Better Regulation	· 장소: Cologne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Berlin) · 참석: Dr. Klaus-Heiner Rohl
2.8 (수)	09:30~11:30	Interview with Industrial Policy and Single Market on Better Regulation	· 장소: Germ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Berlin) · 참석: Dr. Benjamin Baykal, Ms. Andrea Hideg
	12:00~18:00	이동(베를린→프랑크푸르트(공항)→비스바덴(기차))	· LH0191, S-Bahn(S1, S8, S9)
2.9 (목)	13:00~17:00	Presentation and Interview with Federal Office of Statistics: Destatis's role in conducting ex-post evaluation(rGFA)	· 장소: Destatis(Wiesbaden) · 참석: Mr. Fabian Gerls, Ms. Kristina Trusheim, Mr. Carsten Hornbach
2.10 (금)	10:00~12:00	Seminar with Federal Office of Statistics: Standard-cost model	· 장소: Destatis(Wiesbaden) · 참석: Ms. Susanne Michalik, Mr. Arthur Röser
	15:00~17:00	공항(프랑크푸르트)까지 이동	· S-Bahn or ICE (2터미널)
	19:30~15:00 ⁽⁺¹⁾	입국(프랑크푸르트→인천)	· KE0946

4 주요 논의내용

▲ 1. 독일 규제개혁 및 사후 규제영향평가에 대한 워크숍

- 개요
 - 일시: 2월 6일(월) 09:30~16:00
 - 장소: 독일 콘라드-아데나워 재단(KAS) 아카데미, Tiergartenstraße 35, Berlin
 - 참석: Dr. Matthias Schefer(KAS), Prof. Wittberg, Prof. Dietsche(이상 FHM Bielefeld), Mrs. Meister-Scheufelen(Former Chair of NKR Baden-Wurttemberg), Mina Arnoldi(통역사), 최정애(전담대), 전수민 전문위원, 이주원 전문연구원(이상 KDI)

□ 워크샵 주요 내용

- 2022년 독일의 규제개혁 추진기관이 연방수상청에서 연방법무부(Ministry of Justice)로 변경되며, 독일 규제개혁 체계 및 운영시스템에 변화 발생
 - NKR은 2006년 출범한 독일연방정부의 독립적 자문기관이며, 출범 이후 현재까지 연방수상청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최근 연방법무부로 소속이 변경되었고 의장 및 위원들이 대다수 변경
- 이러한 배경 하에서 독일의 규제개혁 제도의 변화 및 현황을 파악하고, 최근 국내 도입을 구상하는 '사후 규제영향평가' 제도에 관한 독일 사례를 공유하고 시사점을 얻기 위한 전문가 워크샵 개최
 - <Section 1>은 KAS의 Dr. Matthias Schefer와 FHM Bielefeld의 Prof. Volker Wittberg 및 Prof. Hans-Jorg Dietsche가 참석하였으며, <Section 2>부터는 Baden-Wurttemberg주 NKR 전 의장인 Dr. Meister Scheufelen 추가 참석
- <Section 1>에서는 지금까지의 독일의 규제개혁 제도의 운영 과정 및 현황에 대하여 FHM Bielefeld 측에서 발제 및 질의응답을 진행
 - 독일은 연방정부, 주정부, 지자체, 더 나아가 EU 차원에서의 규제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를 각 정부의 재량과 역량에 맞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독일 기업에게는 서류제출과 같은 단순 행정비용이 가장 큰 규제비용으로 작용
 - 따라서 규제개선을 위하여 NKR이 발족한 2006년부터 약 5년 동안은 독일의 관료주의 비용(Bureaucratic costs)을 현재의 약 25%로 절감하는 것이 독일 정부의 가장 큰 관심사였으며, 해당 목표는 2012년에 달성된 이후 중단
 - 이후 One-in, One-out(OIOO)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EU 및 독일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규제순응비용을 OIOO 체계를 통해 각각 관리하고 있음.
- 규제 사후영향평가와 관련해서는 2013년 도입된 체계적 규제사후평가 제도가 지금까지는 부처에 강제 적용되지는 않았으나, 2023년부터 수행 예정
 - 독일 정부에서는 연간 10만 유로 이상의 규제순응비용이 소요되는 규제에 대하여 규제시행 3~5년 이후에 반드시 사후평가를 수행하도록 하는 '체계적 사후평가 제도' 도입을 2013년 발표
 - 그러나 부처에 해당 기준을 강제로 적용하지는 않아 지금까지 해당 제도 하에서 사후평가가 수행된 사례는 없으며, 그 외에 부처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사후입법영향평가를 수행

- 그러나 최근(2022년) NKR에서 사후평가에 대하여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체계적 사후평가의 대상을 약 300건으로 선정하여 올해부터 사후평가 제도를 운영할 계획([그림 1])

[그림 1] 독일 사후평가 표준 가이드라인(2022년)



- 추가로 독일 정부의 최근 규제정책 기조와 관련해 질의하였으며, NKR이 최근 연방수상청에서 연방법무부로 이관된 이후 NKR이 영향력이 의도치 않게 일정부분 감소한 것으로 판단
 - 독일 연방정부의 각 부처는 타 부처의 법률 제정 시 통과 여부에 대한 투표권을 갖는데, NKR이 기존 연방수상청에서 위치했을 때는 투표권 없이 조정자의 역할만을 수행
 - 워크샵 참석 전문가들은 NKR의 영향력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연방법무부로 소관을 변경한 것으로 보고있으나, 연방법무부도 법률안을 통과시키려는 부처 중 하나이기 때문에 투표권을 제대로 발휘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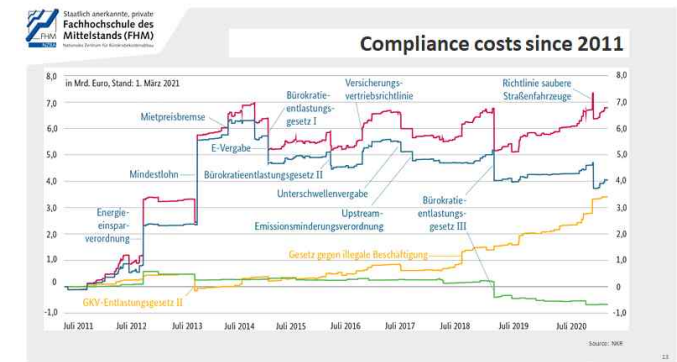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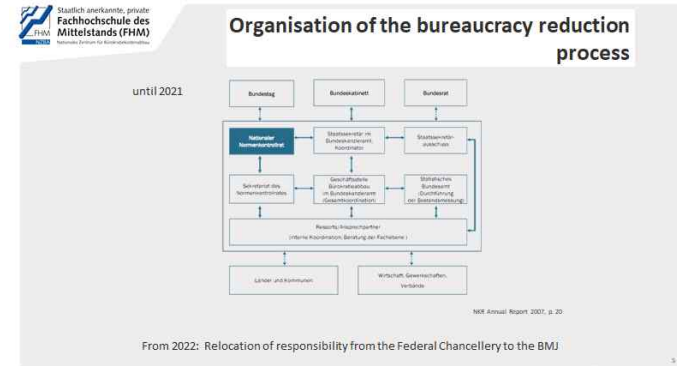
- 못하고 오히려 조정자로서의 NKR의 영향력이 감소하는 결과 발생
- 또한 워크숍 참석자인 Prof. Hans-Jörg Dietsche(독일 연방국토부 소속 공무원 겸임)에 따르면 실제 부처에서는 NKR이 수행하는 사전적인 규제영향분석에 대해 행정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라 규제개혁 추진 동력이 일정부분 약화되었다고 판단
- 다만 코로나19로 인하여 급하게 도입된 규제가 많아 OIOO 및 사후평가 등 기존 규제개혁 체계를 정비하여 운영할 계획

[그림 2] FHM Bielefeld 규제 전문가 발표자료



"History" of the reduction of bureaucracy

- 1969: Federal Chancellor Willy Brandt declares bureaucracy reduction to be the goal of his government for the first time
- 1984: first methodological approach with the "Blue Test Questions":
 - ten test questions on the necessity, effectiveness and comprehensibility of federal legislative projects
- 2002: among other things, "area-wide master plan to reduce bureaucracy".
 - BMWA's call to business associations to submit proposals
 - "Innovation regions" of the Federal Ministry of Economics and Labour, the Bertelsmann Foundation in the test regions of Bremen, East Westphalia-Lippe and West Mecklenburg
 - "sunset legislation" in German federal states as a general time limit on all laws, ordinances and administrative regulations, e.g. Hessen



- <Section 2>에서는 Baden-Wurttemberg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주정부 단위에서 수행하는 규제개혁 제도와 현황에 대하여 공유
- 먼저 연방정부의 특성상 16개의 주정부의 자율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연방정부에서 추진하는 규제개혁에 동참하는 주정부가 제한적
- 2016년 Sachsen주를 시작으로, 2018년에 Baden-Wurttemberg주가, 가장 최근인 2022년 Bayern주와 Thüringen주가 주정부 NKR을 설립하면서 현재까지 총 4개 주정부에서 NKR을 별도로 설치해 운영 중
- Baden-Wurttemberg주의 경우 연방 NKR과 동일하게, 주정부의 입법과정에 대하여 독립적 기관의 입장에서 자문을 수행하며, 규제순응비용을 추정하고 이를 연례보고서를 통하여 투명하게 공표
- 가령 2021년의 경우, 주정부 NKR은 120개의 규제안건에 대하여 검토를 수

행하였으며 이 중 38건에 대하여 규제순응비용을 정량적으로 추정

- 또한 Baden-Wurttemberg주 역시 아직 사후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나 사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사전평가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
- 다만 Baden-Wurttemberg주 NKR 전 의장인 Dr. Meister Scheufelen에 따르면 Bayern주에서는 사후평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혀 향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그림 3] 독일 KAS에서 진행된 독일 규제전문가 면담



▲ 2. 독일 중소기업정책 Better Regulation 담당자 면담

□ 개요

- 일시: 2월 7일(화) 14:30~17:00
- 장소: Cologne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IW), Georgenstraße 22 Berlin
- 참석: Dr. Klaus--Heiner Röhl(IW), Mina Arnoldi(통역사), 최정애 교수(전남대), 전수민 전문위원, 이주원 전문연구원(이상 KD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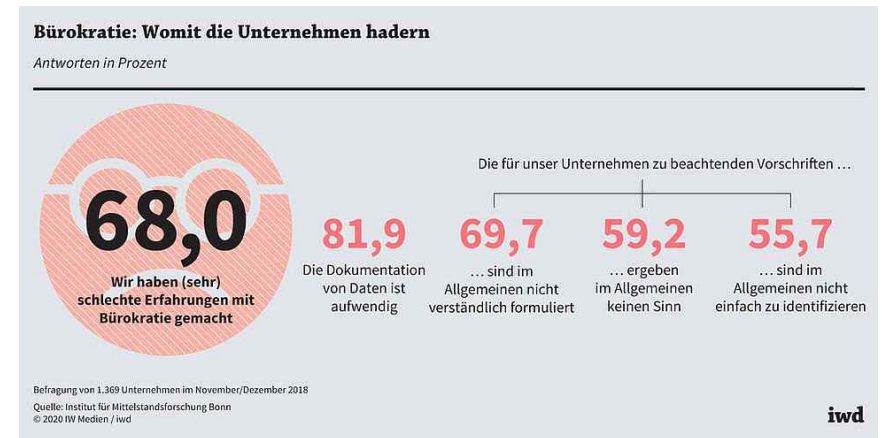
□ 면담 주요 내용

- (기관 소개) 기업협회(business association)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IW는 독일의 경제연구소로서 거시경제, 미시경제, 노동, 교육, 국제무역, 중소기업 정

책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 최근 IW에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화가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공공서비스를 중심으로 디지털 인프라를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추진 중
- 이에 독일의 전자정부를 보다 개선 시키기 위한 연구를 수행¹⁾
- (관료주의 감축) 독일에서는 관료주의로 인한 규제비용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바, 이를 감축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독일에서 적용되는 많은 법률 및 행정규정은 EU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독일의 기업은 상당한 관료주의적 행정부담을 체감하고 있음.
 - 이에 독일에서는 불필요한 관료주의를 축소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존재
 - 독일 기업을 대상으로 관료주의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68%가 독일의 관료주의에 대해 나쁜 경험을 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데이터 문서화 비용에 너무 큰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에서 기인하였음([그림 4]).

[그림 4] 관료주의에 대한 기업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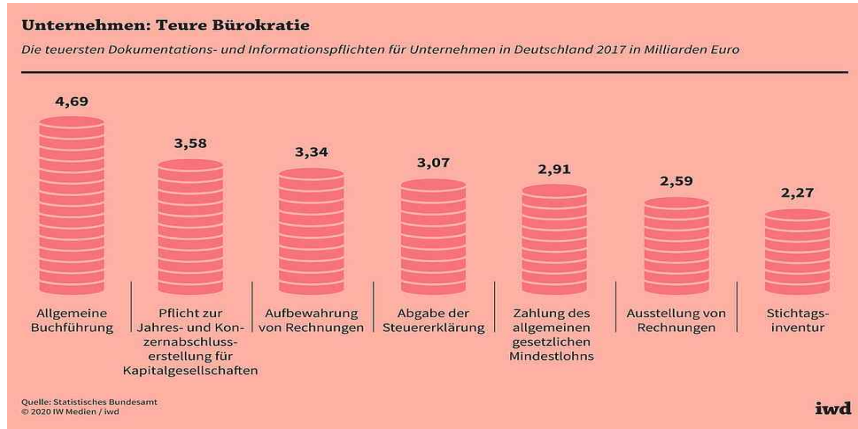


출처: Klaus –Heiner Röhl(2020).²⁾

1) Klaus--Heiner Röhl, E-Government und Verwaltungsdigitalisierung: Stand und Fortschritte, 2022.3.29.(<https://www.iwkoeln.de/studien/klaus-heiner-roehl-stand-und-fortschritte.html>).

2) Klaus--Heiner Röhl, Bürokratieabbau und bessere Rechtsetzung: Wer macht was in EU, Bund und Ländern?. 2020.1.6.(<https://www.iwkoeln.de/studien/klaus-heiner-roehl-wer-macht-was-in->

[그림 5] 관료주의에 소요되는 비용(10억 유로)



출처: Klaus-Heiner Röhl(2020).

- 2017년을 기준으로 문서작업을 위해 약 47억 유로의 비용이 소요되었으며 ([그림 5]), 이에 독일 내 관료주의 비용을 감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수
- 특히, 독일의 중소기업은 전체기업의 99.5%를 차지하고 기업 부문 순부가가치의 약 54%를 차지하는 만큼 대부분의 관료주의적 행정부담이 중소기업에게 발생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에게 발생하는 부담을 축소하기 위한 노력에 초점을 두고자 함.
- (전자정부) 독일은 내부 행정 디지털화와 마찬가지로 전자정부 구현도 매우 느리게 진행되고 있어,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 연방국가에 해당하는 독일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은 매우 길고, 특정 행정절차가 지방자치단체까지 시행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다수
 - 이는 최근의 코로나19 이후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으며,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요성이 제기
 - 특히, 독일 국민과 기업의 수요가 상당히 커져 2017년에 「온라인 액세스법(Online Access Act)」을 마련하고 보다 효율적인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 중
 - 하지만, 「온라인 액세스법」이 제정된 지 5년 이상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eu-bund-und-laendern.html)

행정포털을 통한 공공서비스가 잘 제공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독일의 복잡한 행정절차가 서비스를 구현하는데 큰 지연을 초래했기 때문

- 한국은 훌륭한 전자정부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서 독일의 모범사례로 선정되었으며, 독일 내 전자정부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

- (사후영향평가) 규제비용 보다 규제편익이 큰 경우도 있으나, 이 부분이 사전 규제영향분석에서는 잘 추정되지 않는 경향이 있으므로, 규제도입의 목적이나 편익규모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후영향평가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
- 독일에서도 정치적인 사유 등으로 인해 사후영향평가가 잘 운영되고 있지는 않으나,* 규제도입의 목적이 잘 달성되었는지, 규제순응비용이 잘 추정되었는지 또는 편익규모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사후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 코로나19 이후로 독일 정부는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어, 현재 시점에서는 규제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추가적인 투자는 많이 하고 있지 않은 상황

▲ 3. 독일 연방상공회의소(DIHK) Better Regulation 부서 면담

□ 개요

- 일시: 2월 8일(수) 09:30 ~ 11:30
- 장소: 독일 연방상공회의소(DIHK) 회의실, Breite Straße 29(10178), Berlin
- 참석: Benjamin Baykal, Andrea Hideg(이상 DIHK), Mina Arnoldi(통역사), 전수민 전문위원, 이주원 전문연구원(이상 KDI)

□ 면담 주요 내용

- 독일은 각 주에 위치한 기업들이 주정부의 상공회의소에 소속되고, 주정부의 상공회의소가 연방 상공회의소의 회원인 체계로 운영되며, 금번 출장에서는 연방 상공회의소의 규제개선팀 소속인 Benjamin Baykal 및 Andrea Hideg와 면담을 진행

- 독일 연방 상공회의소가 지역 상공회의소들과 소통하고, 지역 상공회의소들이 개별 기업들과 소통하는 형태로 운영
- 면담자인 Benjamin Baykal은 부처와 주정부 내의 이해관계 기업들에게 규제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업무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규제완화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Andrea Hideg는 해당 부서 동아시아 교류를 담당
- 본 면담에서는 주로 독일의 규제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이해관계자(주로 기업 및 소상공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연방상공회의소(DIHK)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진행
- 정부 입법 이전에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규제의 적절성 및 부담 정도를 가능하거나, 사후적으로 규제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평가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대상이 되는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가 필수적
- 연방정부 부처가 규제의 초안을 작성한 뒤 해당 개정안의 내용을 연방 상공회의소에 전달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요청하고, 이후 부처에서 해당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최종 규제안을 마련
- 다만 구체적 절차가 규정되어있지는 않기 때문에 부처 또는 개정안건에 따라 충분한 의견 수렴 기간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 발생(가령 1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해당 절차를 형식적으로만 활용하는 경우도 존재)
- 특히 독일정부와 연방 상공회의소는 중소기업 친화적인 규제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기울이고 협업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기조가 강소기업(히든 챔피언)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고 평가
- 연방 상공회의소는 중소기업 규제완화 관련한 한국의 사례에 대해서도 질의하였으며, 중기 규제영향평가 등과 같은 제도에 대하여 공유
-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부처에서 수행하는 사후평가와 관련하여 연방 상공회의소에서 의견을 수렴한 사례는 없으나, 최근 태양광 패널 규제와 관련하여 부처와 사후평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
- 지난 2022년 솔츠 정부에서 발표한 대대적인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태양광 패널 규제에 대한 사후평가를 추진할 계획
- 다만 현재는 평가 계획 단계로 구체적인 추진 일정 등은 확인이 불가

[그림 6] 독일 연방상공회의소 규제정책 담당자 면담



▲ 4. 독일 연방통계청(Destatis) 세미나 및 면담

가. 규제 품질 운영체계(Regulatory Quality Management System) 세미나

□ 개요

- 일시: 2월 9일(목) 09:30~14:30
- 장소: Destatis, Gustav-Stresemann-Ring 11, Wiesbaden
- 참석: Fabian Gerls, Carsten Hornbach, Kristina Trusheim(이상 Destatis)
Mina Arnoldi(통역사), 전수민 전문위원, 이주원 전문연구원(이상 KD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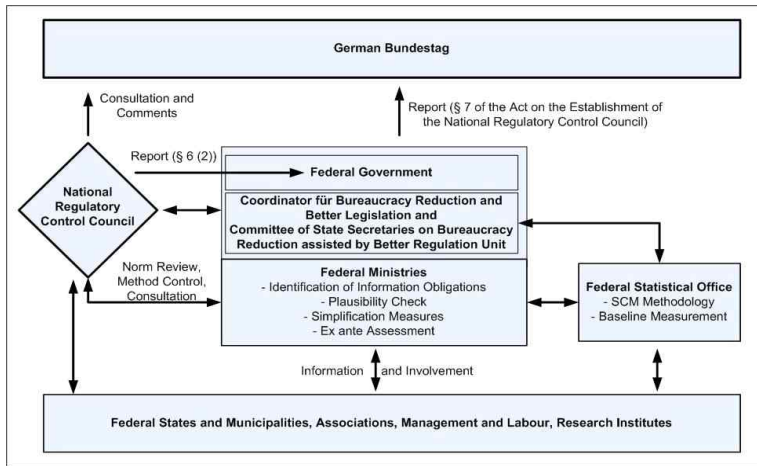
□ 세미나 주요 내용

- (목적) 독일 연방통계청(Destatis)은 독일 내 다양한 데이터를 취합·분석하는 기관으로서 연방통계청 내 사전 및 사후 규제영향평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Better Regulation(BR) 팀과의 세미나를 진행
- 연방통계청 BR팀을 대상으로 한국의 규제품질 관련 제도(규제영향분석, 비용 감축제, 규제일몰제, 사후 규제영향평가)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연방통계청 BR팀의 역할과 분석방법론에 대한 발표를 청취
- 구체적으로, 연방통계청은 BR팀의 조직도를 먼저 소개한 뒤, 업무의 절차와

사전 및 사후 순응비용을 추정하는 방식을 소개

- 또한, 순응비용 추정을 위한 자료를 축적하기 위해 진행했던 서베이 방식과 규제개혁 체감도 등의 조사 결과를 공유
- (조직) 연방통계청 내 BR팀은 총 80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료조사 및 부처와의 소통 업무를 담당하거나 분석방법론 구상 또는 데이터 분석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
- 개별 부처가 규제영향분석의 작성 관련 실무를 수행하며,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연방법무부를 중심으로 연방수상청, National Regulatory Control Council(NRCC), 연방통계청이 소통 및 협업하는 체제로 제도가 운영³⁾

[그림 7] 독일의 Better Regulation 프로그램 조직도



출처: Federal Statistical Office (Destatis)

- (규제순응비용) NKRG 설치법⁴⁾ 제2조에 의거 개별 부처는 사전 및 사후 규제영향분석 시 규제순응비용을 의무적으로 추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때 기업, 국민 및 공공행정에 의해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모두 포함하도록 규정
- 규제가 신설될 시 규제영향분석(특히, 규제순응비용)을 작성하고, 해당 결과

3) 한편, 연방통계청 관계자에 의하면, 순응비용 추정에 대해서는 연방통계청이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 개별 연방 부처가 아닌 연방통계청에서 직접 추정하고 해당 결과를 개별 부처에 전달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음.
4) 「국가규제관리위원회(NKRG) 설치에 관한 법률(Act on the Establishment of a National Regulatory Control Counc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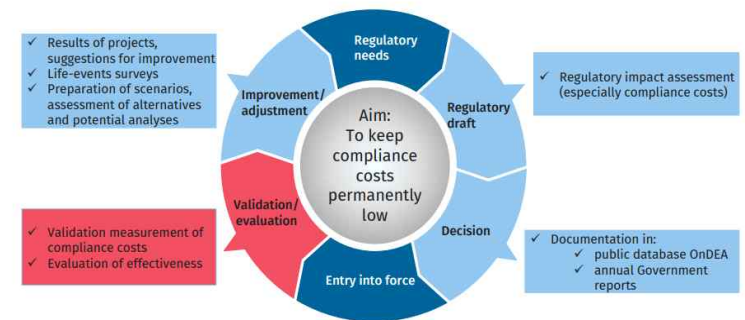
를 공공 데이터베이스에⁵⁾ 업로드하여 대중에게 공개

- 규제가 도입된 이후, 규제순응비용을 영구적으로 낮추려는 목적하에 규제순응비용의 유효성과 효과성을 평가한 뒤 개선방안을 도출
- 규제순응비용은 아래의 <식>과 같이 수량(피규제자 수)에 규제에 소요되는 노동, 행정 및 시설비용 등을 곱한 값으로 추정 가능하며, 추정에 사용되는 변수값은 공식통계, 부처 자료, 전문가 인터뷰, 연구자료 등을 통해 획득

$$Quantity \times component \times Costs \text{ per case} \times Compliance \text{ costs per obligation}$$

- (OIOO) 신설규제로 인한 부담을 축소하기 위해 동일 수준의 규제비용을 out시키는 OIOO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독일은 관료주의적 행정부담 줄이기 위한 노력에 초점을 두고 있음.
- 단, EU 법률, 국제협약, EU 연방헌법재판소 또는 사법재판소의 판결, 안보, 존속기한이 1년 이하인 규제는 제외
- (사후영향평가) 연방통계청은 NKRG 설치법 제8조에 근거하여 규제가 시행된 후 약 2년이 경과하면 사후영향평가를 통해 사전 규제순응비용을 검증

[그림 8] 규제생애주기 및 규제순응비용



출처: Federal Statistical Office (Destatis).

- 동 개정안은 2013년에 제정되어 시행 후, 더 단순하고 더 좋은 규제를 만들기 위한 목적하에 도입되어 평가를 수행

5) 연방통계청에서는 모든 순응비용을 공공 데이터베이스(<https://www.ondea.de/>)에 공개하고 있음.

- 사후영향평가는 연간 100만 유로의 순응비용 또는 10만 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규제를 대상으로 수행되며, 평가결과는 평가보고서에 담아 개선안을 모색
- 한편, 사후영향평가는 2013년에 제정된 이후 최근까지 활발하게 수행되지는 않았으나,* 2019년에 연방통계청이 개별 부처를 대상으로 사후영향평가에 조연하기 시작하였으며 2022년에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마련
 - * 개별 부처의 역량 부족, 시간 제약 등으로 인해 평가의 품질이 낮아, 연방통계청 내에 평가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센터(competence center)를 조성
- 연방통계청은 개별 부처를 대신하여 대규모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며, 사후영향평가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

나. 표준비용모델(Standard-Cost Model) 관련 QnA

□ 개요

- 일시: 2월 10일(금) 09:30~11:30
- 장소: Destatis, Gustav-Stresemann-Ring 11, Wiesbaden
- 참석: Susanne Michalik, Arthur Röser(이상 Destatis), 전수민 전문위원, 이주원 전문연구원(이상 KDI)

□ 면담 주요 내용

- 규제순응비용을 추정하기 위해 도입한 '표준비용모델'에 관한 설명을 듣고, 한국의 규제비용 추정 방식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관해 논의
- 독일은 '더 좋은 규제(Better Regulation)'를 만들기 위해 관료주의로 인한 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목적하에 연방통계청 내 신설 부서를 창립했으며,⁶⁾ 그 이후로 다양한 과제 및 방법론을 추가 개발
 - 2006년 독일 연방통계청은 연방 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새로운 부서인 BR팀을 신설하고 '관료주의 비용 축소 및 규제개선 프로그램'을 시행
 - 프로그램 시행 초기에는 관료주의로 인한 비용을 정량 추정하기 위해 '표준비용모델(Standard - Cost - Model)'을⁷⁾ 활용하여 규제순응비용을 추정

6) 독일 정부는 연방통계청이 중립기관으로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자료를 취합·분석할 수 있고,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다수의 직원이 상주해 있다고 판단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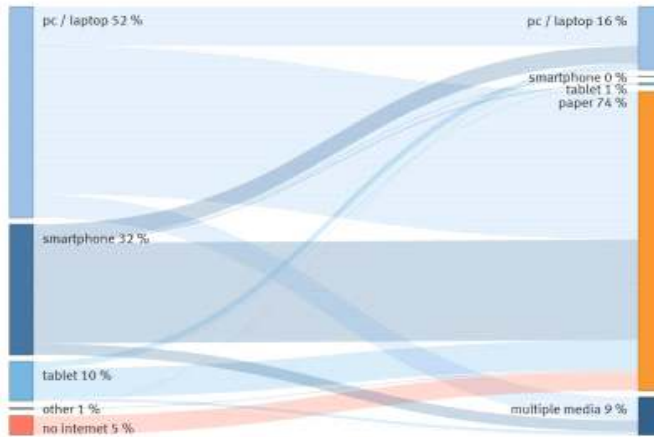
7) 표준비용모델은 네덜란드에서 최초로 개발하여 행정부담을 측정하기 시작했으며, GDP의 3.6%에 해당하는 행

- 최근 해당 부서는 '규제개선을 위한 연방 정부 서비스센터'(2021)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었으며, 더욱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
- 기본적으로 표준비용모델을 위해 전화와 서면 인터뷰를 통해 규제 관련 시간 지출과 재료비에 소요되는 비용(예: 사무용품, IT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
 - 규제로 인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비용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심층 조사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
 - 조사 결과, 관료주의로 인한 비용 중 약 43%가 판매세법 또는 회계의무로 인한 금융비용에 해당하였으며, 해당 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
 - 이러한 조사 절차와 분석 결과는 투명성과 신뢰성을 위해 모두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인 OnDEA에 게시하고 있으며, 총 2500개 이상의 규제순응비용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음.
-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 뒤, 규제순응비용을 추정하고 2년 이후 실제 비용을 재검증하는 과정을 의무적으로 수행
 - 연방통계청에서는 반복적 비용(기업이 지속적으로 부담하는 비용)과 일시적 비용(규제가 제정되었을 시 발생하는 1회성 비용)을 구분하여 규제순응비용을 추정하고 있으며, 비용추정 시 임금상승률과 물가상승률 등의 경제적 효과는 반영하지 않음.
 - 이는 한국 내에서의 기준과 유사한 방식인 것을 확인
- 한편, 독일 정부는 규제개선 프로그램을 통해 관료주의로 인한 비용을 25% 감축하고자 한 목적을 달성했으나, 현실적으로 기업과 국민은 규제개혁 체감을 잘 느끼고 있지 못함에 따라 2년마다 정부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규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
 - 연방통계청은 2015년부터 2년마다 Life-events-survey를 시작했으며,^{*} 2023년에 5번째 서베이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
 - * 2021년에 진행한 4번째 조사는 2,591개 기업과 6,081명의 국민이 참여
 - 동 서베이는 기업과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매우 만족에서 매우 불만족까지 5단계로 질문)를 조사하고, 불만족도가 높은 분야에 대한 규제개선을 위한 노력을 착수

정부담을 약 25% 감축함으로써 기업의 행정부담을 감축하고자 함.

- 서베이 조사 결과, 현재 독일은 e-Gov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수준이며, 현재 독일 정부는 e-Gov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
- * [그림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국민은 주로 컴퓨터(52%) 또는 스마트폰(32%)을 사용하는 반면, 공공서비스는 여전히 종이작업(74%)으로 공무를 수행

[그림 9] 개인(좌) 및 공공기관과의 소통(우)을 위한 미디어 활용 빈도



출처: Federal Statistical Office (Destatis).

[그림 10] 독일 연방통계청 담당자 면담

